

할랄 불고기·한우, 중동 식탁 오른다… K-푸드 수출확대 지원

상주축산농협과 UAE서 홍보활동 불고기 4종, 명실상감한우 선배 농식품·aT 전방위 지원의 결과물

농협이 할랄한우의 중동시장 수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할랄불고기 간편식을 출시하고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시식행사 및 판촉에 나섰다. 지난해 농협은 정부 등과 협력해 할랄한우의 첫 공식 수출이라는 이정표를 세운 바 있다.

농협경제지주는 최근 상주축산농협과 함께 UAE에서 한우 홍보활동을 벌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도 이를 지원했다.

농협은 아부다비와 두바이 소재 한국 식료품 전문매장 1004 고메에서 수출용 간편식 불고기 4종의 시식·홍보를 실시했다. 또 온·오프라인 제품 판매를 통해 현지 소비자들과도 만났다.

상주축산농협은 두바이 프리미엄 한식 당스모키토모에서 '명실상감한우'를 활용한 한우 코스요리를 선보였다. 이 자리엔 주UAE 대한민국 대사 등이 참석했다.



명실상감한우 두바이 홍보 행사.

/상주시

안병우 농협경제지주대표이사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최초로 할랄한우 공식 수출을 해낸 데 이어, 올해는 한우불고기 제품을 중동시장에 선보이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해외 판로를 개척하고 우리 축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갈 길이 아직 멀지만 현재까지의 성과에는 민·관의 유기적 협력이 큰 기여를 했다. 농식품부를 비롯해 aT 등 관계기관의 전방위 지원에 힘입은 결과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초 중동을 방문한 자리에서 할랄 인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내기업에 대한 시장지출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송 장관은 “UAE 정부와 스마트팜, 농업기술 R&D(연구·개발), K-할랄식품 등 식량안보 협력 강화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할랄식품 소비 인구가 전 세계 25%를 차지하는 만큼, 정부는 할랄식품을 수출 다변화 전략품목으로 본다”고 했다. 또 “할랄인증 한우, 딸기·포도 등의 프

리미엄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할랄 인증 지원, 해외 물류인프라 확충, K-이니셔티브 연계 마케팅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할랄한우의 1호 중동 수출은 쉽게 따낸 결과물이 아니다. aT의 경우, 공사의 두바이지사가 2022년부터 현지 수요조사와 제도 분석에 착수했고 국내 도축장의 할랄 인증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지난해 1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내 최초로 황성 소재 도축장이 UAE 정부의 할랄 도축장 인증을 획득한 것이다.

또 같은 해 6월 두바이에서 열린 K-푸드 박람회에서는 할랄한우 런칭쇼를 개최해 현지 바이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어 9월에는 도축장 최종 등록 승인을 마쳤다. 드디어 작년 10월 냉장·냉동 한우고기가 인천공항과 항만을 통해 UAE행 선적을 개시하게 됐다.

민·관이 함께 3년간 쌓아 온 협력의 결과물이다.

올해 3월에는 중동 진출을 위한 다자간 MOU도 체결됐다. 농협경제지주와 aT, 한우수출조합협의회, 황성케이씨 간 협약이다. 이들 기관은 ▲UAE 등 수출 신규 시장 개척과 소비지변 마련 ▲수출 활성화 전략 수립과 공동 마케팅 추진·홍보 등을 통한 중동지역 한우 수출사업에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데 뜻을 모았다.

최근 UAE에서는 한류 확산과 함께 고급 한국식 바비큐 레스토랑이 늘고 있다. 자연스럽게 교민과 현지 고급 소비층을 중심으로 프리미엄 한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중견기업에 1000억 지원해 ‘중핵기업’으로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 10대 핵심 기술서 세계시장 주도 산업부, 올해 말까지 과제 발굴

정부가 중견기업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중핵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과제당 최대 100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미래 유망 분야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서울 LW컨벤션 센터에서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 과제 기획·발굴을 위한 원탁회의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기획 방향과 추진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위원장인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과 한국공학한림원 윤의준 회장을 비롯해 기

술·경제·정책 분야 산·학·연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월드클래스 10대 날개 프로젝트’는 중견기업 주도로 시스템 단위의 초격차 기술을 개발해 미래 10대 유망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을 키워내는 사업이다. 기존의 대표적 지원 사업인 월드클래스 사업을 계승·발전시켜, 10대 핵심 기술을 글로벌 도약의 ‘날개’로 삼겠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부품·소재·장비·공정·완제품 등 전 가치사슬을 포괄하는 시스템 단위의 대형 과제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독자 기술개발은 물론 특허·표준, 판로·인증, 해외진출 등 상용화 전 과정을 과제당 최대 5년 동안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원 과제는 현존 기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술과, 기존 시장에서 압도적 기술 우위를 확보할 수 있

는 기술을 중심으로 선정된다.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기 위해 업계 대상 수요조사와 간담회를 거치며, 해커톤 방식을 도입해 기술 확보 가능성을 심층 토론·검증해 올해 말까지 10대 후보 과제 발굴을 완료할 방침이다.

발굴된 과제는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2027년 선행연구와 2028년 선도과제로 우선 지원되며, 나머지 과제도 과학기술 및 예산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2029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10대 날개 프로젝트를 통한 시스템 기술 개발이 우리 중견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비상하는 날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중견기업이 시스템 기술과 공급망을 주도하는 글로벌 중핵기업으로 성장하고,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가 복원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송미령 “농지조사 우려 불식 협조해 달라”

(농식품부 장관)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 참석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 투기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시 제재 대상이 아님을 재차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15일 전북 무주에서 열린 제16차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방침을 알렸다.

송 장관은 명백한 투기 이외에 농촌 현장에서 발생한 일반적 사안의 경우, 이번 농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 처분의무 또는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를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속 농지 관행적 임대차를 처분에 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농업 현장 내 우려 확산 방지에 협조해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당부했다.

송 장관은 “농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군수님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군수협의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주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등 선순환 구조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에는 전국 76개 군이 참여하고 있다. 농어촌 군 지역 간 연대·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창립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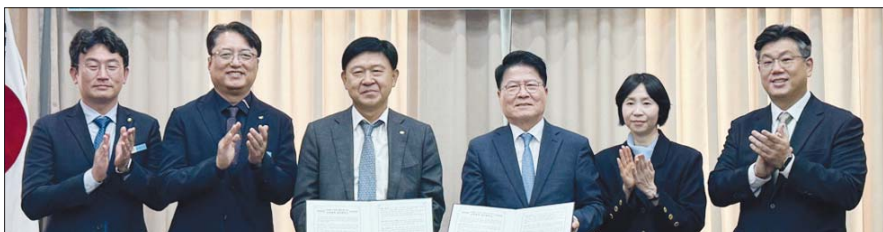
한전, 전력설비 전자파 정보 객관성·신뢰도 높인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맞손’

한국전력이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전력설비 주변의 전자파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와 협력한다. 사업자가 직접 설명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성과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한전은 지난 14일 나주 본사에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과 ‘전력설비 전자파 이해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력설비 건설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 확산으로 주민 우려가 끊이지 않았던 상황을 정면 돌파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한전은 전력설비 및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전력설비 전자파 이해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후 (왼쪽 세번째부터) 김호곤 한전 송변전건설단장, 이주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전

전자파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하고 현장을 지원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정보 전달과 지역 주민 소통, 이해 증진 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현재 국내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법정 인체

보호 기준(83.3μT) 이내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특히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345kV 송전선로 바로 아래에서 측정되는 전자파는 약 1.53μT 수준으로, 헤어 드라이기(3.8μT), 전자기라인지(2.9μT), 안마기(1.94μT)보다도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한용수 기자

공공소각 시설 대비 7.5배 많아 적극적 에너지 자원화 대책 시급

난방과 발전 등에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소각열 상당수가 민간 소각시설에서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소각열을 회수하는 공공시설과 달리 민간 시설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다가오는 직매입 금지 시대를 대비해 적극적인 에너지 자원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정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울)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민간 폐기물 소각시설의 열에너지 미회수율은 31.2%로 집계됐다. 이는 공공 소각시설의 미회수율(4.2%)과 비교해 약 7.5배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2024년 공공 소각시설은 폐기물

약 491만 톤을 소각해 발생한 열에너지의 95.8%를 회수·활용했으며 미회수량은 42만 4831Gcal에 그쳤다. 반면 민간 소각시설은 비슷한 수준인 약 541만 톤을 소각해 1987만 4514Gcal의 열에너지를 발생시켰으나, 이 중 31.2%에 달하는 620만 7629Gcal을 회수하지 못하고 공중으로 날려 보냈다. 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열에너지 총량만 따지면 민간이 공공보다 약 15배나 많은 셈이다.

시도별 미회수 현황을 보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다. 연간 620만 Gcal에 달하는 민간 미회수 열에너지는 경기(148만 7139Gcal), 울산(128만 5988Gcal), 전남(117만 2095Gcal), 경북(86만 5603Gcal), 경남(38만 3015Gcal) 순으로 많았다. 미회수율 기준으로는 광주(71.1%), 전남(58.0%), 부산(51.0%)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 열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회수하지 못하고 버리고 있었다.

/세종=한용수 기자